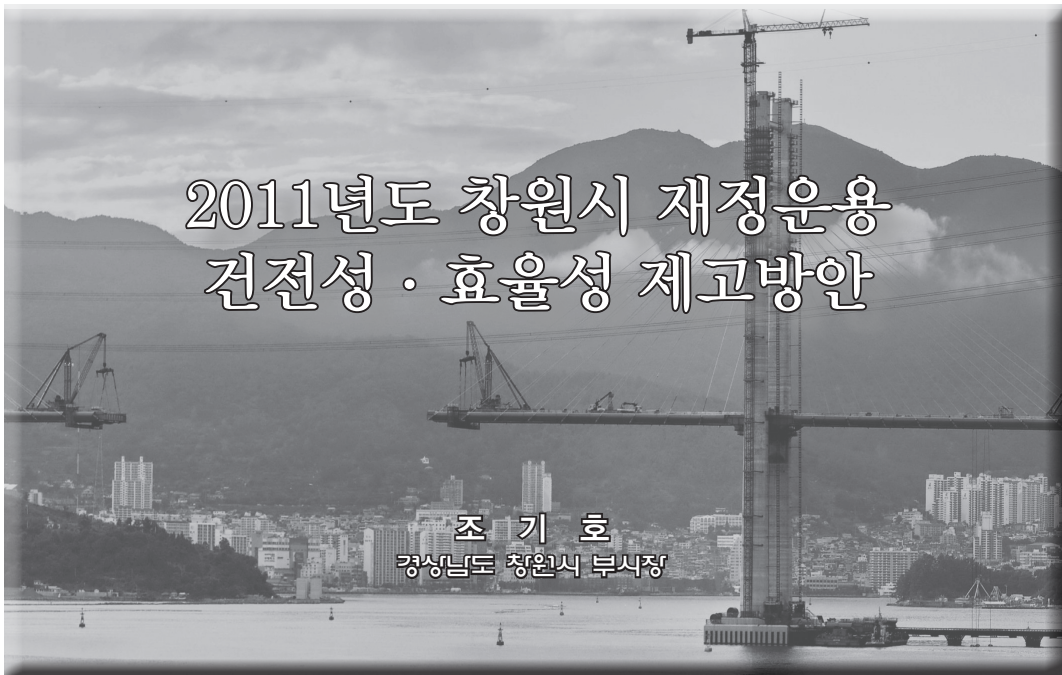




2011년도 창원시 재정운용 건전성 · 효율성 제고방안

조 기 호
경상남도 창원시 부시장

I. 통합 창원시 현황

1. 일반현황

통합 창원시는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제1호로 지난해 7월 1일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통합되기 전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생활 · 경제권이 동일하나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불합리한 부분들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고 제기되어 왔으나 통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2009년 12월 창원 · 마산 · 진해시 각각의 의회에서 통합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2010년 3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편의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메가시티 창원시가 탄생하였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8만 1,182명(2010. 7. 1기준)으로 전국 시 · 군(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

모가 되며, GRDP(지역내총생산)**도 21조 7,637억 원으로 전국 시 · 군 중 1위로 도약하게 되었다.

* 수원 107만 5천명, 성남 95만 7천명, 고양 93만 8천명

** 구미 17조 1,702억 원, 화성 15조 4,198억 원, 수원 14조 7,094억 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 규모 비교 〉

구 분	인구 (명)	면적 (km ²)	GRDP (억원)	예산총계 (억원)	재정자립도 (%)	공무원 정원(명)
서 울	10,208,312	605.25	2,201,346	290,679	90.4	15,888
부 산	3,543,030	766.12	494,336	106,815	55.5	6,301
대 구	2,489,781	884.07	302,437	71,892	50.7	4,852
인 천	2,710,579	925.60	433,110	97,609	75.7	6,204
광 주	1,433,640	501.25	202,990	39,325	42.9	3,002
대 전	1,484,180	539.86	208,024	37,884	54.5	3,112
울 산	1,114,866	1,057.50	432,143	32,066	59.3	2,294
통합창원시	1,080,471	743.48	217,637	22,386	-	3,792
수원시	1,073,149	121.01	147,094	14,356	65.9	2,490

※ 인구 등은 2010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 GRDP는 2006년 기준

2. 재정현황

통합 창원시 최초의 예산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시가 각각 편성 · 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 · 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총 2,348,143백만 원이다. 통합 창원시는 2010년 9월 7일 2,426,442백만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12월 22일에는 2,389,773백만 원의 최종예산을 확정지었다.

〈 통합 창원시 예산 증감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본예산 ①	'10.7.1 통합예산 ②	'11.본예산 ③	증 감 율			
				③-①	%	③-②	%
계	2,238,621	2,348,142	2,262,134	23,513	1.05 ↑	Δ 86,008	3.66 ↓
일반회계	1,595,432	1,686,563	1,717,642	122,210		31,079	
특별회계	643,189	661,579	544,492	Δ 98,697		Δ 117,087	

2011년도 본예산은 2,262,134백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717,64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44,492백만 원이다. 2010년 7월 1일 통합예산 대비 86,008백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2010년도 창원 · 마산 · 진해시의 본예산의 합계보다는 1,235백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회계간 전출입금 최소화, 각종 특별회계 사업의 부진 및 축소 운영, 구 창원시가 2010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미교부 등의 사유로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A)	'10.통합예산 (B)	증 감 (A-B)	비 고
총 수 입			2,262,134	2,348,142	△86,008	3.7% ↓
지	방	세	541,181	508,467	32,714	6.4% ↑
세외 수입	소	계	753,265	960,874	△207,609	21.6% ↓
	경	상	446,972	431,081	15,891	
	임	시	306,293	529,793	△223,500	
지	방	교 부 세	258,563	306,143	△47,580	15.5% ↓
재 정 보 전 금			165,000	104,500	60,500	57.9% ↑
보 조 금	소	계	512,291	457,398	54,893	12.0% ↑
	국	비	367,991	341,646	26,345	
	도	비	144,300	115,752	28,548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31,834	10,760	21,074	195.9%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490,194백만 원(2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경분야의 예산도 웰빙시대 흐름에 따라 307,389백만 원(13.6%)으로 통합예산 대비 31,831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인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22.3%(30,302백만 원)가 감소한 105,31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과정에서 기존 3개시에서 추진하여 오던 각각의 시책에 의거 시민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지원금(지급액)에 대하여 상향조정 및 전역 확대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

소하였다.

〈 2011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

(백만원, %)

구 분	'10.통합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증가율 (B/A)
총 지 출	2,348,142	2,262,134	△86,008 _{0.}	△3.7
1. 교육	39,739 (1.7%)	39,602 (1.7%)	△137	△0.3
2. 문화 및 관광	212,740 (9.1%)	226,294 (10.0%)	13,554	6.4
3. 환경	275,558 (11.7%)	307,389 (13.6%)	31,831	11.6
4. 사회복지	463,794 (19.8%)	490,194 (21.7%)	26,400	5.7
5. 보건	39,251 (1.7%)	26,217 (1.2%)	△13,034	△33.2
6. 농림해양수산	82,482 (3.5%)	95,433 (4.2%)	12,951	15.7
7. 산업 · 중소기업	81,620 (3.5%)	100,083 (4.4%)	18,463	22.6
8. 수송 및 교통	334,449 (14.2%)	265,842 (11.8%)	△68,607	△20.5
9. 국토 및 지역개발	371,450 (15.8%)	272,349 (12.0%)	△99,101 _{0.}	△26.7
10. 공공질서 및 안전	16,127 (0.7%)	14,260 (0.6%)	△1,867	△11.6
11. 일반공공행정	135,619 (5.8%)	105,317 (4.7%)	△30,302	△22.3
12. 기타	295,313 (12.5%)	319,154 (14.1%)	23,841	8.1

II. 재정운용상 애로사항

1. 통합이후 세입예산 증가율에 비해 재정수요 과다

통합전 창원 · 마산 · 진해시의 예산순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창원이 47.9%인 1,046,110백만 원, 마산이 38.1%인 831,567백만 원, 진해가 14.0%인 305,321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부족한 마산 · 진

해 시민들은 그 동안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예산사정상 많은 반영이 되질 않은 상태였는데, 상대적으로 다소 재정여건이 양호한 창원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많은 재정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합 창원시에 대해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많은 민원 · 사업의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통합시의 세입은 앞서 살펴봤듯이 세입이 조금은 증가하였지만 통합시민의 재정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통합이후 첫 본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지급)하던 예산들에 있어서는 그 수혜대상들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통합예산에 비해 5.7%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분야의 예산은 통합예산 대비 26.7%인 991억 원 감액 편성으로 지역의 개발을 열망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통합의 체감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011. 사회복지 및 SOC분야 예산 비교 〉

구 분	'10.예산액 (전체예산 比 비율)	'11.예산액 (전체예산 比 비율)	증 감(율)
사회복지	4,638억(19.8%)	4,902억(21.7%)	264억 (5.7%)
국토 및 지역개발	3,714억(15.8%)	2,723억(12.0%)	△991억 (△26.7%)

2. 舊 창원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舊 창원시가 2010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약 300억 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264억 원 교부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2011년도 통합 창원시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다소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기준에 의거 통합 창원시의 기준재정부족액이 줄어들어 통합시의 보통교부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

년도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2010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 해 국가의 지방교부세 총 재원은 지난 해에 비해 10.3%인 2조 8천억 원이 증액되지만, 통합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해 그 혜택을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통합으로 인한 상향 · 확대 지원에 따른 부담 가중

통합전 3개 시에서 각각의 기준에 의거 지원하여 오던 경비에 대하여 통합이후 최고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지급하던 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함에 있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72건에 27,47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통합으로 인한 수혜부문 상이경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개 인	단 체	보 육	기 업	예술단	학 교	공무원
통합전	83,419	27,567	4,444	1,759	96	9,327	8,648	31,578
통합후	110,892	34,418	9,285	4,768	144	10,500	16,635	35,142
증가액	27,473	6,851	4,841	3,009	48	1,173	7,987	3,564

201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일괄 상향조정은 재정여건상 불가한 실정이어서, 조례 · 규칙에 지원액이 명시된 사업 외에는 기존 3개시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였고,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축소하거나 년차별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편성하였던 관계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급기준을 3개 지역 중 최고액으로 지원 할 경우에는 투자재원 부족 및 재정압박이 뒤따를 것이며, 지급기준을 평균금액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축소 수혜자들의 불만 표출이 예상된다.

4. 향후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부담 가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의

거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무특례를 두고 있다. 물론 소방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道稅인 ‘공동시설세’를 市稅로 전환시켜 준다 하지만 소방업무 처리 소요경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통합 창원시에는 현재 3개의 소방서가 있으며 경남도 전체에서 센터 등 조직은 20.1%, 소방관 정원은 596명으로 21.5%, 소방대상물은 대도시 특성상 33.5%로 3분의 1을 차지하며,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도 4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시세로 전환되는 공동시설세는 132억 원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재정부족액만 하여도 연간 270억 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업무를 통합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면 3개 소방서를 총괄 관리 · 지원하는 소방본부 신설, 통합 상황실 및 소방방재 교육장 확보, 소방헬기 · 고성능화학차 ·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초기비용이 약 300억 원 가량 별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소방업무 처리 소요예산 〉

구 분	조 직					정 원 (명)	소방 장비	소 방 대상물	소방 활동	소요예산 (억원)
	계	센터	구조대	소방 정대	지역대					
경남전체	129	80	20	2	27	2,765	663	123,102	162,426	1,745
창 원 시	26	21	3	1	1	596	135	41,280	38,141	402

※ 부족액 : 270억 원 = 402억(운영경비) - 132억(공동시설세)

※ 3개 소방서 총괄 관리 · 지원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미포함

└ 창원시 소방본부 신설, 통합 상황실 · 소방방재 교육장 확보,
소방헬기 · 고성능화학차 ·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III. 재정운용 건전성 · 효율성 제고방안

1. 대형사업 재평가 실시

통합 창원시는 지난 해 11월 옛 3개 시가 추진하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

평가 작업을 벌여 사업시기나 규모 등을 대폭 조정하였다. 시는 이 가운데 36개는 계속 추진하고, 20개는 조정대상으로 정해 사업축소나 사업내용 변경 ·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조정대상 20개 사업은 일반사업이 11개이고 산업단지 9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등은 축소했다. 창원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과 마산 가포뒷산지구 개발은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창원 감계, 마산의 창포 · 난포 · 삼진, 진해의 용원 · 제덕 · 죽곡 등이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마산 석곡과 두척첨단산업단지는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며, 마산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진해지역 명동해양단지 조성사업은 통합이후 다른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 등 핵심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진해청소년문화회관의 경우 사업규모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411㎡에서 4,300㎡로 축소되고 사업비도 229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배 이상 줄이는 등 대형사업 재검토를 통해 총투자 사업비 1조 1,837억 원을 감축(7조 9,850억 → 6조 8,013억) 시켰으며, 향후 10년간은 2,00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 토대를 마련하였다.

〈 100억 이상 대형사업 재검토 결과 〉

구 분	사 업 명	구 분	사 업 명
계	56개 사업	내용보완(1)	로봇랜드 조성
계속추진(36)	도시철도 등 36개사업	시기·방법조정(2)	귀산지구 개발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와성지구 개발
사업축소(3)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	장기검토(9)	창원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가포뒷산지구개발
사업전환(1)	안민터널앞 지하차도 건설		감계·창포·난포·삼진·용원·제덕·죽곡2 산단
내용변경(2)	마산역세권 개발	검토후 추진(2)	석곡·두척첨단 산단
	해양신도시 조성		

2.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지출 효율화

통합이전의 舊 창원 · 마산 · 진해시는 각각의 실정과 재정여건에 따라 대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정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었다.

통합이후 각각의 기준에 의해 다소 방만하게 시행하여 오던 사업(시책)들로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기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일몰제 적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통합 창원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통합이전 대비 311백만 원이 감소한 1,888백만 원이다.

통합시는 출범하였지만 옛 3개시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단체들의 통합은 신속히 이루어지질 않았다. 각각의 시에서 나름대로 고유의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행정구역 통합과 같이 정해진 로드맵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기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관계로 자율적인 통합을 기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과 기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단체에 대하여는 하향조정이 불가피 하였다.

그래서 통합전 3개 시에서 각각 단체의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단체로 통합대상 단체 중 통합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보장 차원에서 기존 3개시에서 지원받던 보조금의 합계를 보장해 주었고, 미통합 단체에 대하여는 2010년도의 87.6%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를 위한 사업(110개 사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함)에 대하여는 2010년도 수준을 유지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공익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31개 단체로 전체의 12% 차지함)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사회단체의 자립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 통합전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조정현황 〉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신 청			조 정			비 고
	단체수	사업수	금 액	단체수	사업수	금 액	
2011년도	276	374	4,744	258	333	1,888	통합시
2010년도	304	438	4,920	274	385	2,199	3개시
증 감	△ 28	△ 64	△ 176	△ 16	△ 52	△ 311	'10.대비

둘째, 지방채의 규모를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이전 3개시의 전체 채무액은 228,271백만 원으로 최종예산의 9.1%를 차지하지만 통합이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채무액을 적극적으로 상환한 관계로 2010년 말에는 전년 대비 채무액을 456억 원 줄이고 최종예산 대비 7.6%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계속해 신규 지방채 발행에는 신중을 기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채무비율을 예산액 대비 6% 내외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 통합전후 창원시 채무액 현황 〉

(년도말 기준 / 백만원)

년도별	채 무 액	최종예산	채무비율	비 고
2008년	165,450	2,333,792	7.1%	창원·마산·진해시
2009년	228,271	2,495,596	9.1%	"
2010년	182,662	2,389,773	7.6%	통합 창원시

셋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아직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사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이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효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시는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였다. 통합전 옛 3개시의 부서별 상이한 경상경비 편성내용을 심층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하였으

며, 사업예산에 있어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반영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보다 내실있게 운용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의무적 경상경비 외의 사업비 등에 대해 원인행위시 예산부서와 합의 후 지출토록 하는 등의 내부규제를 통해 사업예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으로 추가지출을 지양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시급한 현안사업 등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간 30억 원, 총지출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초기 기획단계에서 부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였고, 성과관리도 강화해 성과관리평가에서 ‘미흡’ 등급이 나온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이상 삭감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등급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사업폐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IV. 자율 통합시 재정 제도개선 건의사항

1. 도세 징수액 추가교부 최고 상한을 적용

통합이전의 창원시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 대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연간 264억 원)받아 세입부족에 따른 급격한 충격으로부터 벗어났지만, 2011년도부터는 통합 창원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되면서 지난해 지원받던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존 3개시 각각의 기준에 의거 지원하여 오던 경비(상이경비) 중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경비의 추가소요액이 275억 원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시·군 자율통합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통합 창원시에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도지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

되는 재정정보전금과 별도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매년 386억 원이다. 2011년도부터 특별재정보전금 미교부 및 통합으로 인한 상이경비 발생 등의 재정결함이 발생함으로 최고 상한율인 100분의 10을 지원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2. 소방업무 이관 유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통합 창원시가 시범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업무 처리에 연간 40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소방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市稅로 전환되는 공동시설세는 연간 132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연간 27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통합으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므로 소방업무 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 확보방안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동 업무추진의 유예를 건의 드립니다.

3. 안정적 추가재원 확보방안 강구

통합 창원시는 향후 성공적인 시 · 군 · 구 통합의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장된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수행하여 오던 일과 기본적인 업무추진에도 매년 15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통합 창원시 미래 신성장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 386억(도세 추가교부액) - [264억(특별재정보전금 미교부)+275억(상이경비 추가소요액)] = 153억

4. 통합시 재정지원 재원의 명확한 명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

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재원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 명시내용이 없는 관계로 통합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혼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시·군 통합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국비, 광특 등 재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 통합 직전 연도 3개시 보통교부세액(2,433억)의 6%(146억)을 10년간 지원

5. 복지분야 정부 보조율 상향 지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1년도 국가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2010년 대비 20.1% 증가한 보육지원 예산안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하는 시기에 중산층에 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6.2%이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9%로 상승함으로써 전체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세출예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창원시의 2011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서 나타나듯 복지와 같은 의무지출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재량지출 증가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동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국민 복지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율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건의 드립니다. ☺